

화학공장 재난관리 시스템 “시급”

여수 시민-환경단체 강력 주장 ... 정부와 화학기업의 책임 촉구

10월3일 발생한 호남석유화학 폭발사고를 계기로 각 산업단지의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및 보유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수시 시민단체와 여수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여수산업단지는 화학공단의 특성상 주로 유독가스 및 위험물을 취급하는 고 위험군 기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근 마을 주민과 1만여명이 넘는 현장 근로자들이 상시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 따라 1970년대부터 2002년까지 총 196건의 각종 사고가 발생해 91명이 숨지고 158명이 다쳤다. 2003년에도 KCC, 남해화학, LG-Caltex정유, LG화학 등 여수산단에서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고 때마다 지적되는 형식적인 안전진단과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불감증, 땀질식 보수 및 복구 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제2, 제3의 사고를 낳고 있다.

여수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여서 산업단지 내 각종 사고와 관련한 국가 차원의 총체적 재난관리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업단지의 대형 사고에 대비한 주민 이주대책, 주민 대피훈련, 공장-마을 간 비상 연락망 체계 구축 등 국가와 자치단체, 산업체 등이 공동 참여하는 중·장기적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월3일 호남석유화학 폭발사고 당시 여수시는 사고 발생 1시간이 지난 뒤에야 주민 대피령을 발령해 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안전 사고감시 시스템 구축도 사고 재발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화학기업들의 미온적 대처로 무산되기는 했지만 여수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주장한 <여수산단 환경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가 좋은 사례이다.

폭발사고 이후 호남석유화학 주변 모습



사진 제공)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조환익 정책국장은 “화학산업의 특성상 단 한건의 사고에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와 작업자들의 안전의식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시는 여수산단에서 안전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안전관리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입주기업들은 여수산단 전체 공단에 대한 환경안전 정밀진단과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특히 정부는 여수산단을 재난위험시설지역으로 지정하고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emical Journal 2003/10/07>